

“尹 부부 국정농단 규탄”... 서울역서 범국민대회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공동취재)

민주, “정권 끝장내자” 총공세... 참석자들도 “국민이 심판한다” 구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거리 투쟁에 시동을 걸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정의 집회로 정권 퇴진 운동과는 거리를 뒀지만 지도부에서도 “내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대규모 정의 집회(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국 당원 등 민주당 추산 약 10만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단 왕국은 끝나고 민주 공화국이 새출발하는 출정일”이라며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박정희·전두환보다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국의 적들이 잠시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외쳤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비리에도 무능

하기까지 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려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8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양 공정과 상식을 떠들면서 청와대를 양수시켰는데 지금은 배우자의 비리 의혹을 덮기에 급급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며 “심지어 마누라의 비밀을 덮기 위해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 공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 오늘이 그 행동의 날”이라며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팔장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서울역에서 윤 정권 심판 열차 출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춧물로 물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

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밥 먹듯이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군주민주(君民水)라는 역사의 교훈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경고했다.

“군주민주”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의미다.

이날 파란 표지를 입은 참석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 규명이 적인 파란색 피켓을 들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국민이 심판한다” “국힘도 공범이다, 특검 수용 결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역 4번 출구 인근 무대부터 승례문 앞까지 많은 인파가 몰려 이동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가 경찰과 실랑이를 빚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집회 과정에서 검거·연행된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전체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는 핵심 소위원회로서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불리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역할을 비롯한 30여년간의 공직 경험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2020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역대 최대인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연 바 있다. 예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윤 의원이 이번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예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국회 의원실 내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하여 전북지역 국가예산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날(31일)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윤준병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재정을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민생과 미래를 위협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예산으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필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승락 심의를 예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전북 발전을 위한 시급성이 될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 해 예산삭감 폭거의 아픔을 대수할 수 있도록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尹 지지율 10%대 진입

한국갤럽 19%, 문화일보·엠브레인 17%

입기 반란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일 연이어 나왔다. 취임 후 첫 10%대 진입이다.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권과 보수층 내 지지율 하락이 관찰되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날 27~28일 2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은 17%, 부정은 78%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TK)에서 34%, 부산·울산·경남(PK)에서 23%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서울은 12%,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1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 윤 대통령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이념 보수층 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부정평가(59%)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지지율이 21%, 70대에서 34%로 나타났다. 50대 이하 구간에서는 10%대 초중반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한국갤럽 10월 5주차 조사 결과 역시 19%로 첫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날 29일~31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19%, ‘잘못하고 있다’가 72%로 집계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TK에서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18%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PK 지지율은 5%포인트 내린 22%였다.

연령별 지지율은 60대 지지율이 7%포인트 내린 24%, 70대 이상에서는 전주와 같은 41%로 나타나 부정평가보다 낮았고, 이념 보수층 내 지지율은 7%포인트 내린 3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17%)’였다.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경제·민생·물가’는 14%로 2위였다.

2012년 1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매주 실시한 이래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밑돈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2012년 7~8월) 3주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2016년 10월~)의 두 경우였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은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 마지막 날인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과 명태균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

민주 이재명 대표, ‘尹 부부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춧물로 물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대규모 정의 집회(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권력자의 합리성이 아닌 비합리성과 불의,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2016년 촛불 혁명 이후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지만 데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 무슨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인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며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고 유권 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꼬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다툼과 계파갈등 속에 백발백중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며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과 살상무기 지원 추진,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의 엄청난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국가인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며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는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용과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야당을 달래며 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 비난, 야당 발목잡기만

하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 있느냐”며 “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생각인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을 보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며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스

전북자치도, 보건의로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논의하고자 ‘보건의로 얼라이언스 공공의료고도화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고도화를 위한 전복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도내 주요 보건의로 관계자들이 모여 공공의료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지선 분과위원장(전북대학교병원

공공부서 부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복형 공공의료 고도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의제로는 △통합돌봄과 의료 연계 확장 △필수의료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공공병원 자원 공동 활용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 진행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임혁백 교수 등 강연자 나서

전북연구원은 국가적 이슈로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함께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자치도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백년포럼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도청 대강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 정동영 국회의원,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서

계획이다.

먼저, 5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제의 원인과 지속적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12일에는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미중 패권 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

질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26일과 12월 3일에는 정동영 국회의원과 이광수 광수내 북덕방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안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 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백년포럼 기획시리즈를 통해 도민들이 민생 안정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행감·예산 심사 대비 연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지난 1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실과 임실군 일원에서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8일부터 열리는 제4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전북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자료 사전분석과 다각적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안위 위원들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본 후 행정사무감사 평가사항 및 질의 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2025년 본예산 편성 심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민선8기 전북도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심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제41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도정 운영방향과 행정사항 중 문제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